

## 카타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논의내용

작성자 : 김윤옥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일 : 2012년 12월 20일

### ■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주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별다른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하였음.

-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효력 연장기간은 2020년까지이나 일부국가들(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탈퇴할 것을 선언
  - 이들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
  -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밖에도 주요 온실가스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역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에서 제외
  -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역시 감축의무에서 제외
-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교토의정서 기간에는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인 유럽연합,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을 합쳐도 규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
- 한편 제 1차 교토의정서 기간에는 각국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기간에는 감축이 각국 정부의 약속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음.

### ■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나갈 것을 합의

-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는 없는 대신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sup>1)</sup>대비 30% 감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음.
- 한국은 2020년부터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감축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1) BAU는 온실가스 비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표시방식이며 이는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 전망치를 말함. 따라서 경제 상황이 변화할 경우 배출 전망도 함께 변할 수 있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배출량 감축목표보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짐. 한국은 2009년부터 국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BAU기준으로만 표기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 만료이후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GCF 사무국 유치를 인준 받음.
- 또한 선진국들이 2010~2012년 간 기후변화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2013~2015년 동안 지원할 것을 격려

■ 이번 회의에서 GCF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사무국 유치 이후 후속작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은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 사안으로서, 개도국은 2015년까지 600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소극적 대응
  -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EU위원회만이 2015년까지 총 60억불 지원을 약속
    - ※ 2010년부터 3년간 300억 달러로 책정된 긴급지원금은 2013년 만료예정
- GCF 재정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2013년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 19차 기후총회로 미루어짐에 따라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남은 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